

고금라고물가 시대, 위기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목차

- I. 금융복지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가?
- II. 경기도 금융복지사각지대의 특성
- III. 정책 제안

경기도 금융복지사각지대 잠재규모는 대략 230만 명 추산

- ▶ 코로나19 이후 '20년 8월 기준 극저신용자 수는 907,578명(8.3%)이었으나 불과 2년 사이 약 39만 여명이 증가
 -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가장 많고, 2인가구 포함 과반 수 이상이 1:2인가구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
 - 경제활동인구 중 상용직 근로자비율이 36.1% 수준이고 평균 월소득은 199.8만원으로 '22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인 194.4만원과 불과 5.4만원 차이
 - 극저신용대출 이외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가 81.5%이고, 평균 채무규모는 5,333.9만원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의 피해노출에 취약한 집단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신용기회사다리' 제공

- ▶ 금융복지사각지대 위기요인 및 복지욕구에 기반한 31개 시군별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 금융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시그널 선제적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간 촘촘한 금융복지위기사례 통합관리체계 구축
 - 극저신용대출 만기상환을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기획개발
- ▶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조기상환, 성실상환자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기회 제공
 - '22년 수립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상환관리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금융상황 악화 예방과 신용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인센티브 제공
 - 향후 대출상환금을 (가)경기도 서민금융기회기금으로 전환, 도내 금융복지사각지대의 신용회복 및 금융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근로의지 유지 및 경제적 자립 기반에 필요한 씨드머니 지원을 통한 저신용저소득 도민의 미래 자산형성 기회 제공

우선 추진 사업

- ▶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 31개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 ▶ 생애주기별 금융복지서비스 개발 및 실행 ▶ 신용기회사다리 시범사업



ISSN 2982-5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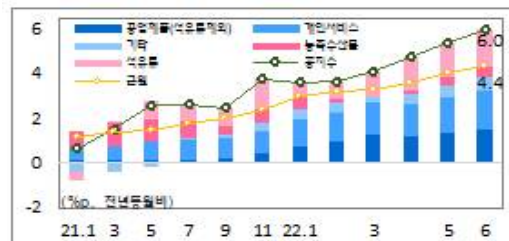
I. 금융복지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가?

물가상승·금리인상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경제부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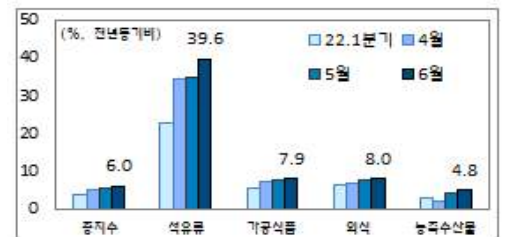
고금라·고물가 시기의 경제적 부담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 ▶ 글로벌 에너지·곡물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세계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년 만에 6%대 기록1)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원재료 공급망 위축에 따른 전세계 에너지·곡물가격 급등으로 물가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EU 등 주요국 물가는 최근 40년 만에 고점수준에 도달하였고, 고물가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 정부발표에 따르면 '22년 6월 기준 국내 소비자물가인상률도 전년동월비 6%로 2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였고,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식품(7.9%), 외식(8.0%), 축산물(10.3%)을 중심으로 오름세도 지속(기획재정부, 2022)

〈그림 1〉 물가상승 기여도 분해



〈그림 2〉 품목성질별 물가상승률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기획재정부.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둔화와 에너지·먹거리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

-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가 해소되기도 전에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가계 생계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거둬들인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상환부담도 커지는 등 민생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 특히 1분위 가구의 식료품·외식·교통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확대

〈그림 3〉 생활물가지수 추이



〈그림 4〉 분위별 식료품·외식·교통 지출비중(22.1/4)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기획재정부.

1) 관계부처합동(2022).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기획재정부.

I. 금융복지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기도 내 극저신용자 규모는 약 230만 명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취약차주의 대출증가와 함께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 기관으로 몰리는 추세

-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22.12)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의 대출규모²⁾는 '22년 3/4분기 기준 1,014.2조원에 달했고, 대출금리 급등에도 연14.3%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문제는 취약차주³⁾의 대출증가율(18.7%) 전년동대비 일반차주의 대출증가율(13.8%)을 약 5% 앞질렀고,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시중은행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

경기도 금융복지사각지대의 잠재적 인구규모는 대략 230만 명으로 추산

▶ 경기도 금융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인구규모는 신용평가회사(CB사)가 평가한 개인의 신용도를 신용점수(舊등급)별로 분류시킨 인원수로 추정 가능

- 신용평가회사(CB사)가 평가한 개인의 신용점수를 근거로 정부와 금융권 신용대출로부터 배제되어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신용평점 하위 10%(舊 7등급 이하)에 분포한 이들을 '극저신용자⁴⁾'로 명명
- '22년 말 기준 경기도 극저신용자 규모는 전체 신용정보보유자(13,448,935명) 중 총 2,257,373명(0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이력부족자 포함)으로 16.8%를 차지
- 코로나 19 발생 후 '20년 8월 기준 극저신용자 수⁵⁾는 907,578명(8.3%)이었으나 불과 2년 사이에 약 39만 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극저신용자 비율(16.8%)은 전국 비율(17.7%)보다 다소 낮은 편이나, 유사한 분포를 보임

〈표 1〉 경기도 신용점수(등급)별 인원규모

(2022.12.31. 기준 / KCB)

신용점수	신용등급	경기도		전국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01 ~ 1,000	5등급 이상	5,563,688	41.4	20,265,587	39.5
801 ~ 900		1,951,535	14.5	7,373,394	14.4
701 ~ 800		2,064,786	15.4	7,985,302	15.6
601 ~ 700		-	2,167,164	16.1	8,794,349
671 ~ 700	6등급	1,611,553	12.0	6,617,428	12.9
601 ~ 670		555,611	4.1	2,176,921	4.2
501 ~ 600	7등급 이하	236,332	1.8	861,805	1.7
401 ~ 500		50,615	0.4	193,448	0.4
301 ~ 400		15,283	0.1	59,249	0.1
1 ~ 300		440,521	3.3	1,699,642	3.3
0		959,011		4,082,808	
7등급 이하 소계			2,257,373	16.8	9,073,873
합계		13,448,935	100.0	51,315,584	100.0

자료 : KCB(2022)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계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
 3)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일컫는 용어
 4) 극저신용자 개념은 2020년 등급제 신용평가 기준 CB사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
 5) 석희정 외(2020), 『경기도 서민금융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I. 금융복지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가?

시장논리에 따른
금융시장 운영이
금융소외문제를 발생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동하는 금융시장과 중앙정부시스템

- ▶ 우리사회의 금융시장은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운영⁶⁾
 - 국내 금융시장은 철저히 ‘저위험-고수익 원칙에 입각한 민간금융회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운영방식을 고수해옴
 - 이러한 이윤 극대화를 통한 금융자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중은행들의 행태는 오랜 기간 정부당국의 주요방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금융권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음
- ▶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대응책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시장의 자금공급 축소의 결과로서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발생
 - 박성진 외(2022)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마련하여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위험회피를 용인해준 점을 지적
 - 문제는 자금공급 긴축이 지속될 경우 최우선 순위로 배제되는 대상은 바로 저신용·저소득인 고위험 계층임에도 정부당국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 금융공급보다는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위험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 유인 제공(박성진·석희정, 2022)
 -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일정 이하 신용도를 가진 시민들은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이 제한되는 현상을 일컬어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라고 명명
- ▶ ‘금융소외’의 제도적 원인은 은행이 개인에 대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인 신용도 평가에서 비롯
 - 신용도는 신용평가회사(CB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점수(舊신용등급)를 통해 지표화 되지만, 이러한 평가방식은 차주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본질적 내포하고 있음⁷⁾
 - 그로 인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결과 초래
 - 금융소외를 사회적 차원으로 해석하면 금융취약집단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교육, 주거, 고용 등 다른 기회마저 차단당하는 복합적 위기를 양산
- ▶ 사회적 통합마저 위협하는 금융소외문제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전략은 ‘금융시장 편입(Financial inclusive)’을 통한 ‘빈곤퇴치(poverty alleviation)’에 초점

6) 박성진·석희정(2022). 『1인가구의 저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1권10호. 122-124p.

7) 이현돈(2013). 『소비자금융의 저소득, 저신용자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65-175p.

I. 금융복지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가?

서민금융 공급의 불충분, 높은 대출금리가 서민의 부채증가, 가계수지 악화를 초래

국내 서민금융제도의 역기능

- ▶ 2010년 전후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 저신용·저소득계층에 맞춘 신용대출 공급을 실행
 - 정책서민금융⁸⁾은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서민에게 자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서민금융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임
 - 그간 정부의 개입으로 제1·2금융권에서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이후부터 생계·주거, 창업·운영, 고금리대안 자금 등 다양한 상품들을 공급해옴
 -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은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던 대부업 등과 비교하여 저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자금유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자비용감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역할 수행⁹⁾

〈표 2〉 국내 정책서민금융상품 유형별 운영현황

상품	취급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만원)
근로자 햇살론	저축, 상호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 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금리 10.5% 내, 한도 1,500 내
햇살론15	은행		금리 15.9%, 한도 700
햇살론유스	은행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②만34세이하 ③미취업청년 등	금리 3.6~4.5%, 한도 1,200 내
안전망대출II	은행	최고금리 인하일('21.7월) ①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②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③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	금리 17~19%, 한도 2,000 내 (햇살론17(15) 통합한도)
햇살론뱅크	은행	정책서민금융상품 1년 이상 이용,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된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 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금리 4.9~8%대, 한도 2,000 내
미소금융	미소재단	①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금리 4.5% 내, 한도 (창업) 7,000 내 (생계) 1,200 내
사업자햇살론	저축, 상호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 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금리 10.5% 내, 한도 2,500 내
새희망출씨	은행	①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이면 서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금리 10.5% 내, 한도 3,000 내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8.5.)

- ▶ 문제는 서민금융제도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민의 부채증가와 가계수지 악화라는 역효과를 초래
 - 최배근(2020)에 따르면, 시장 차원에서 서민금융상품은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공급규모가 부족하고, 대출금리도 높은 편이어서 서민들의 부채증가와 가계수지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
 - 정부 차원에서도 '16년 이후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대다수 상품의 문턱이 높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

8) 최배근(2020). 『기본대출은 금융민주화의 출발점』. 기본대출 특별호. 경기복지재단

9) 박성진·석희정(2022). 『1인가구의 저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1권10호. 121~143p.

I. 금융복지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가?

금융소외계층은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으로 금융빈곤층으로 추락

- 예컨대,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은 중신용도(舊신용등급 1~6등급) 수준의 대상에게만 공급이 집중되고, 새희망홀씨¹⁰⁾는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급 예정
-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신용평점 하위 10~20%(8~10등급)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대출금리도 높아 서민의 자활이나 부채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

▶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정책서민금융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기

-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고위험-고금리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획일적인 저금리상품을 정부당국이 공급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조장하는 문제를 지적한 연구¹¹⁾부터 차츰 은행이 정책대상자인 저신용·저소득 차주보다 신용도가 높은 차주를 선호하는 편향성을 지적한 연구¹²⁾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룸
- 또한 대출차주의 관점에서 금융공급을 매개로 금융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에 무관심해 온 점을 비판한 연구¹³⁾ 등 정책서민금융에 내재된 다양한 한계점을 지적
- 결국 정부 차원에서 공급해오던 정책서민금융도 제도권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부실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신용공급 정책 노선을 유지한 결과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소외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음

▶ 금융소외계층은 금융문제로부터 시작되지만, 종국엔 빈곤문제로 귀결되는 소위 '금융복지사각지대'라는 금융 빈곤층 확산

- 애초에 금융소외계층은 미등록 대부업과 같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시급한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함
- 이처럼 높은 이자비용 부담은 머지않아 채무불이행이라는 신용위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상당한 추심압박을 견디다 못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기
-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의 제약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¹⁴⁾
- 코로나 19 발생 직후 경기도는 금융취약도민 중에서도 신용도 악화로 정책서민금융조차 이용할 수 없었던 금융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극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舊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액대출사업 실시, 금융취약계층의 빈곤 예방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

10) 시중은행 자체재원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지원대상이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혹은 4.5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舊신용등급 6등급 이하)

11) 박창균(2014).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응용경제. 16권2호. 65-100p.

12) 송치승·박재성(2019).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체계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 4권4호, 87-119p.

13) 남재현·신인석(2012). 『서민금융정책의 현황 평가와 향후 과제』. 금융정보연구, 1(2), 61-83.

14) 김안나(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227-2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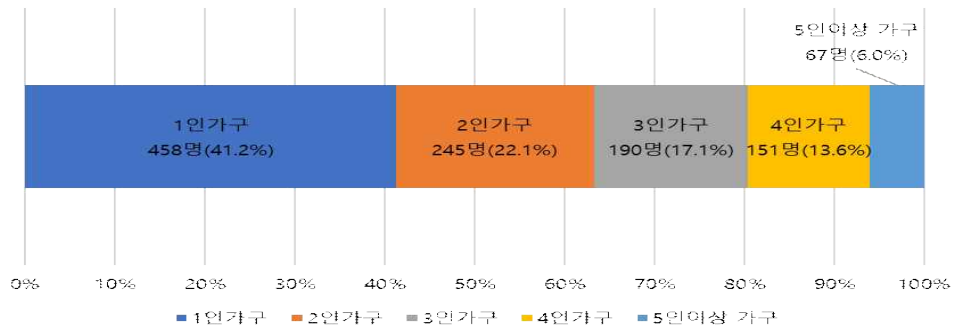
II. 경기도 금융복지 사각지대의 특성

극저신용자의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가장 많고, 89.5%가
경제활동 참여 중

경기도 금융복지사각지대는 자립의지가 강한 사회경제적 한계가구

- ▶ 극저신용자의 가구형태는 1인가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인가구로 과반수 이상의 1~2인가구가 사회경제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구조
 - 경기도 내 금융복지사각지대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신용평점 하위 10% 또는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극저신용대출자 실태조사¹⁵⁾ 실시
 - 실태조사 결과, 평균 가구구성원 수는 2.2명이고 41.2%가 1인가구이며,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 가구분포를 보여 이들이야말로 사회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이들 중 상당수가 오랜 기간 저신용-저소득의 악순환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서 가족해체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 가능

〈그림 5〉 가구구성원 수(n=1,111)



자료: 석희정 외(2022, 경기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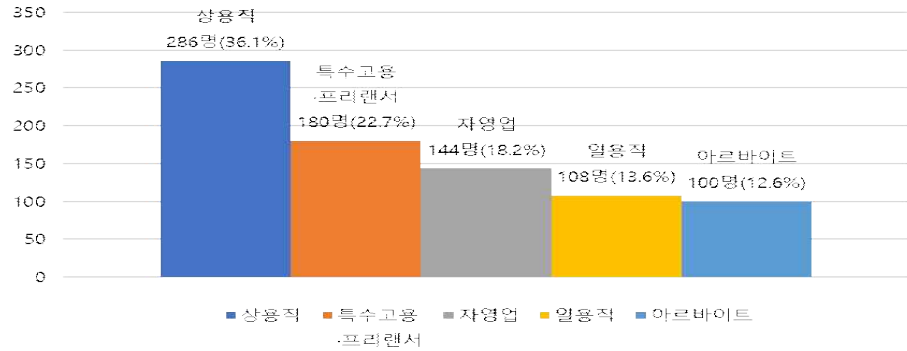
- ▶ 극저신용자들은 크지 않은 소득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한계적 경제상태에서 낮은 신용도로 인해 외부의 충격에 매우 취약한 근로빈곤층에 해당
 -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89.5%가 경제활동에 참여중이거나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의지가 강한 집단을 확인함
 -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중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36.1% 수준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갖지 못하여 경제활동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5) 석희정 외(2022).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상환 및 지원관리체계 수립 연구』. 경기복지재단.

II. 경기도 금융복지 사각지대의 특성

극저신용대출가구의 가장 큰 지출항목은 주거비가 31.7%, 카드대금·채무상환이 31.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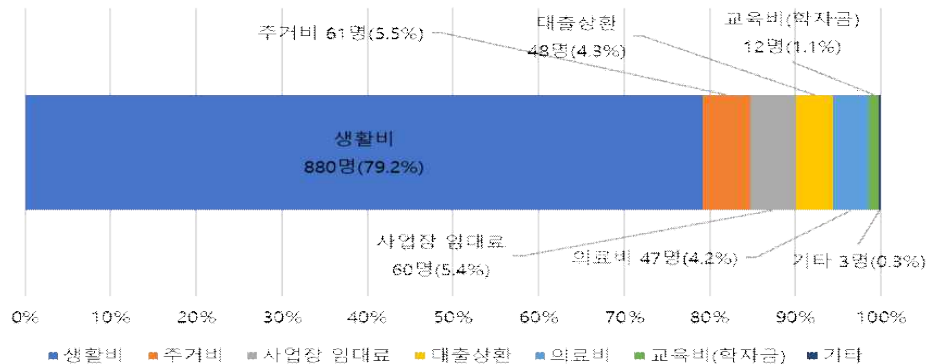
〈그림 6〉 금융복지취약계층의 직업유형(n=792)



자료: 석희정 외(2022, 경기복지재단)

- 이들의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가구별 평균 월 소득액은 199.8만원으로 '22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94.4만원과 불과 5.4만원 차이¹⁶⁾가 났고, 월 지출액은 188.6만원으로 월 소득액 평균과 11.2만원 차이가 남
 - 경제활동 가구원당 평균 월 소득액은 164.5만원으로 '22년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소득인 191.4만원¹⁷⁾보다 26.9만원 더 적은 금액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전형적인 저소득 취약계층임
 - 가구소득유형은 근로소득이 52.7%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득 22.5%, 기초생활수급 21.5%, 일용소득 16.5%, 연금소득 12.5% 순으로 나타나 극저신용자의 상당수가 저임금 근로소득 또는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었음
- 가구의 가장 큰 지출항목은 주거비 31.7%와 카드대금·채무상환이 31.3%를 차지, 생존에 필수적인 주거비(31.7%), 식료품비 및 외식비(20.1%)를 합산하면 50%를 상회함
 - 이러한 결과는 극저신용대출 신청목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즉 생활비가 79.2%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 5.5%, 사업장 임대료 5.4%, 대출상환 4.3%, 의료비 4.2%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중 80%에 달하는 저신용·저소득 도민들이 당면한 생활고를 이유로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함

〈그림 7〉 극저신용대출 신청목적(n=1,111)



자료: 석희정 외(2022, 경기복지재단)

16)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https://www.law.go.kr/LSW//admRullInfoP.do?admRulSeq=2100000203521&chrClsCd=010201#AJAX>

17) 고용노동부(2022).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II. 경기도 금융복지 사각지대의 특성

다중채무자 81.5%,
평균 채무는
5,333.9만원이며,
자력에 의한
채무상환이 어려움

저신용의 늪에 빠져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잠재적 피해집단

- ▶ 극저신용대출 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가 81.5%였고, 평균 채무규모는 5,333.9만원으로 나타남
 - 석희정 외(2022:59) 보고서에 따르면, 극저신용자들의 채무규모를 살펴보면 상당수(77.7%)가 5천만 원 이하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는 14.5% 차지
 -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서'(44.8%)였고, 그 다음으로 25.4%가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서', '원금 및 이자 금액이 너무 커서'(23.7%) 순으로 나타남
 - 채무상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1순위가 대출지원(76.8%)인 점을 비추어볼 때 극저신용대출로 해소되지 않는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
- ▶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실제로 채무조정을 위한 상담을 받거나 이용한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
 -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8.6%, 채무조정 상담경험은 5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실제로 채무조정제도 이용으로 이어진 경우는 53.0%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채무조정제도 유형에는 개인회생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개인파산 30.5%, 워크아웃 25.7%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채무조정이 필요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및 제도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 ▶ 채무상환의지는 높은 반면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해서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
 -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8%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응답자의 75.7%가 '근로를 통해서' 상환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37.2%이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이 부족해서 사실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44.8%를 차지
 - 저신용으로 인한 금융 이용기회의 제약은 극저신용자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에도 기존 채무를 자력으로 해결하긴 매우 힘든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가계현금 부족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신용기회사다리' 제공

사각지대 복지육구 및 위기 발굴을 위한 촘촘한 금융복지안전망 구축

- ▶ 금융복지사각지대의 위기요인 및 복지육구에 기반한 31개 시군별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 경기도 금융복지사각지대를 대표하는 극저신용대출자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재무적 특성 등 복지육구 및 위기상황에 따른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
 - 저신용으로 인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가계재무 여건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자활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촘촘한 연계방안을 마련
 - 경기도 금융복지취약계층의 위기 시그널 선제적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간 촘촘한 금융복지위기사례 발굴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 ▶ 극저신용대출 만기상환율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개발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이용자의 특성과 위기요인에 따라 향후 만기상환율에 적잖은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년부터 다양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준비
 - 특히, 극저신용대출 이용자의 약 80%가 중장년층이라는 점에서 40~60대층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복지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20·30 청년층의 경우, 합리적 소비와 저축, 투자, 부채예방 등 건강한 재무관리 역량강화에 필요한 주기적인 금융교육 및 재무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금융복지사각지대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신용기회사다리' 제공

- ▶ (제언 1) 극저신용대출 조기상환·성실상환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기회 제공
 - 우선 극저신용대출을 통해 확보된 도내 금융복지사각지대에 기 수립된 상환관리분류체계(예. 연체, 경제 및 위기요인, 상환의지, 자활가능성, 접점유지율 등)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상황 악화 예방과 신용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인센티브 제공
 - 극저신용대출 조기상환 및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등을 대상으로 향후 대출상환금을 (가)경기도 서민금융기회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신용회복 및 금융지원에 재투입
- ▶ (제언 2) 근로의지 유지 및 경제적 자립 기반에 필요한 씨드머니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제공
 - 극저신용대출 상환대상군 중 가구소득, 근로상태 등 경제상황과 상환의지가 높고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을 완료한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 참여 기회 보장
 - 자산형성지원의 재원은 기존 대출(조기)상환금과 향후 경기도 재정지원사업 예산 확충을 통해 마련하고, 현행 청년통장지원사업과 대상자 중복지원 배제 등 관련 조례 개정